

## 주요정책의 출발점, 통계분류

Column



통계정책국장 이명호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산업과 직업이 있을까? 현재 통계분류 항목 기준으로 산업 1,205개, 직업 1,231개가 있다. 정책부처 담당자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산업분류가 필요하다. 관련 산업범위와 규모 등을 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생활과 관련하여 직업분류는 보험사가 사고보상 보험금을 책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통계분류는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이다. 현재 통계청은 법적 준수 의무가 있는 표준분류 7종, 법적 준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특수분류 25종, 법적 준수 의무가 없는 일반분류 6종 등 총 38종의 통계분류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경제·사회현상을 잘 반영한 분류는 정부 주요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국내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제때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3대 표준분류(산업, 직업, 질병·사인)는 5년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광범위한 의견수렴, 기관 협의, 개정심의 및 자문회의 등 각 단계별로 마련된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표준분류는 모두 각각의 국제분류를 모태로 한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각각 작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들은 국가간 비교도 가능하다.

통계청은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11차) 고시하였다. 신산업 성장 등 산업구조 변화와 국제분류의 기준을 반영하여 수소, 이차전지, 전기차,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을 포함한 개정이다.

특히, 융·복합 및 미래성장산업 중 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분류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수분류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정부지원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분야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2년 주기의 특수분류 개발 수요창구를 연중 개방하여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산업분류 개정과 6개월 시차를 두고,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7월에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보건 및 복지 분야의 확대에 따라 보건전문가와 복지전문가를 구분하는 등 노동시장의 직업변화를 반영하여 분류항목을 신설·세분하였다. 노동시장 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인쇄 관련 기계 조작용 등의 분류항목을 통합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신종질환 출현 등 질병과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내외 보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의 3대 표준분류 외에도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 등 4종의 표준분류가 더 있다. 국제기준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국민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신체, 개인, 사회의 관점에서 코드화한 표준건강분류의 최초 개정이 마무리되어 7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개발·권고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그동안 연구·개발한 한국범죄분류를 일반분류로 제정할 계획이다. 각종 범죄데이터의 수집·분석과 사회안전분야 통계작성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통계청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인 통계분류포털을 통해 통계분류별 코드집, 분류 해설서, 신·구 분류 연계표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류 관련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분류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해 국제기준의 변화 추세를 주시하고, 분류별로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의 작성 및 보급에 노력할 것이다.